"한나라 부산 권력독점 폐해"

정세균 대표 "견제·균형 사라진 지방자치 장식품 전락"

민주당이 16일 한나라당 텃밭인 부산에서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독점 폐해를 강하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이는 지방 권력의 독점에 대한 폐해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정책 공약을 내세움으로써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지방권력의 교체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 정책위가 부산에서 주최한 '한나라당 지방권력 독점폐해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지금까지 부산에서는 한나라당 일당이 오랫동안 지방권력을 독점해왔다"고 지적한 뒤 "이 때문에 한국의 제2도시였던 부산이 정체 혹은 후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당의 독재로는 지방권력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장식품 같은 지방자치는 국민 세금만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영남이 문제다. 중선거구제가 대구시를 시작으로 모두 분할됐다. 이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며 "4인 선거구에 1명이 되면 소금의 역할을 해야 견제와 균형은 없다"면서 기초의원 4인 선거구 분할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정 대표는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선거혁명을 통해 다른 정파가 들어와 정당정치의 근본이 살아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바로 부산에서 필요하고 광주에서 필요하다. 일당 독점 구조를 깨지 않으면 지방선거의 의미와 정치발전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정길 부산을 바꾸는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도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자치 19년 동안 한나라당 일당 지배구조의 폐해로 지방자치의 의미와 가치가 상실되고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종속물로 전락했다"며 "지방의제가 실종되고 보조금 중심의 공공개발만 난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위원장은 또 "부산의 부패지수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14위가 됐으며 노령화 세계 1위, 출산율 최저, 경제활동인구 외지 유출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는 등 일당독재의 폐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이날 토론회에서는 부산 발전의 후퇴가 한나라당 일당 독점 구도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권력의 일당 독점 구조는 정치발전의 저해 요인이라는 점을 부각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한편, 이날 당 정책위는 부산지역 공약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및 보육정책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을 제시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16일 민주당 정세균(왼쪽에서 세번째) 대표가 부산시 낙동강 하구언 일대를 방문해 4대강 사업을 비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호남 권력독점 더 심각"

민주노동·진보신당 "선거구 쪼개기까지 강행하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6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한나라당의 부산권력 독점 폐해' 발언과 관련해 '적반하장'이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장원섭 예비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호남에서 민주당의 지방권력 독점 폐해는 영남에서 한나라당 일당 독점 폐해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전국 최초 공권력 동원 '4인 선거구 쪼개기' 강행과 민주당 기초·광역의원, 기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의 짜고 치는 특별교부금 지원 등은 호남에서 민주당 지방권력 독점 폐해가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공권력까지 동원해 광주시의회가 '4인 선거구 쪼개기'를 한 것은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 이미지에 먹칠한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장 후보는 "광주시장과 광주 5개 구청장, 기초·광역의원 중 90%가 민주당이어서 견제와 감시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됐다"면서 "이 때문에 사실상 광주시의 주인은 시민이 아닌 민주당이며,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함이 이제 극치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 때면 모두가 지역 일꾼을 자처하지만, 결국은 당선 후 중앙당 눈치보기에 급급해 풀뿌리 지방자치가 훼손되고 있다"면서 "정 대표가 영남에서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독점 폐해'를 운운한 것은 후한무치한 행위다"고 비난했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다양한 견해가 존중되야 하고, 다양한 세력이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독주가 지역발전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후보는 "정 대표가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그동안 민주당을 밀어줬던 호남에서 먼저 반성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도 이날 "민주당의 호남 권력 독점 폐해는 한나라당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존의 군소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몇 자리 안 되는 기초의원까지 차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4인 선거구 분할'이 대표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야권 연대 5+4 합의 과정에서도 민주당이 전체 선거구에서 경쟁력 중심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지역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것 아니냐?"라며 "광주·전남에서의 지방권력 독점 폐해에 따른 민주당의 반성과 독점 해소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진보신당 노회찬(가운데) 대표 등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당 2주년 기념식에서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운동 접습니다"

"선거구 넓고 유권자 알아주지도 않고…" 교육감·교육의원 출마자들 포기 속출

"교육감·교육의원이 장학사 보다도 높은 사람이요?"

전남에서 6·2선거 교육의원에 출마하는 A씨는 선거운동을 포기하기로 했다.

A씨는 "유권자들이 교육의원이나 교육감이 장학사보다 높은 사람이냐고 묻더라"면서 "교육의원과 교육감이 무슨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지도 모르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하루종일 돌아다녀도 유권자 20명을 만나기도 쉽지 않다. 선거운동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생각에 저를 포함해 선거운동을 포기한 후보자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감 출마자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도 교육감 예비후보 C씨는 "선거구가 넓고, 조직도 없어 선거운동을 어디서부터 해야 할 지 엄두가 나질 않는다"면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대부분의 유권자들은 교육감 선거가 있는 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사상 첫 직선제로 치러지는 전남도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무관심으로 선거운동을 사실상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선거구가 워낙 넓고 1인 8표제로 치러지는 복잡한 선거구도 때문에 예비후보로 등록만 해놓고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는 경우도 많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전남에서 도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자는 6명, 교육의원은 18명(5개 선거구)이다.

이들은 예비후보로 등록 후 선거 사무실을 열고 지역구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선거 등에 묻혀 별다른 선거운동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들 중 상당수는 선거운동을 사실상 포기하고, 오는 5월 13~14일 정식 후보 등록 이후 추첨으로 결정되는 후보 순위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교육감·교육의원 선거는 '정당 후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기호'가 부여되진 않지만, 투표지에 민주당을 연상시키는 두번째 자리에 이름을 올릴 경우 당선이 유력하다는 판단에서다.

전남도교육감에 출마하는 모 후보는 "22개 시·군에 이르는 전남지역을 돌아다니는 데도 한계가 있고, 그나마 사람이 모이는 지역 행사장을 찾아가 봤자 '천덕꾸러기' 취급만 받는다"면서 "최근 모 시민단체의 행사장에 참여했는 데, '저 사람이 왜 왔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며 선거운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이춘 전남도교육위원회 의장은 "올해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첫 직선제로 선출하는 '교육자치의 원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이 투표용지의 이름 순서에 따라 당선된다면 전남교육의 미래는 암울할 것이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시민배심원제 경선 참여 않겠다"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 탈당 입장 밝혀

황일봉 광주 남구청장은 16일 "현재의 민주당 룰(규칙)대로라면 시민배심원제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당 입장을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마감인 민주당 시민공천배심원제 후보자 공모에 응하지 않았다.

황 청장은 이날 "강기정 의원이 제3자를 통해 공정 경선을 보장한다는 각서를 써준다고 했으나, 믿기 어렵고 시민배심원제는 조작가능성이 있다"며 "남구청장 경선 방식이 시민배심원제로 최종 확정되면 민주당을 탈당해 평화민주당 또는 국민참여당에 입당하거나 무소속 후보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주민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민배심원제 후보자 공모에는 광주 남구에서 김영집·김화진·박용권·이철원·이호준·정범석·정재수·정재훈·최영호 예비후보 등 9명이 등록했으며 무안군에서는 서삼석 현 군수와 김석원·김철주·정해균 예비후보가 각각 등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